

투데이 칼럼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노인정책에 거는 기대

“나 이 들어도 존엄하게 살고 싶다.”
이 간절한 소망 앞에서 우리 사회는 과연 무엇을 해왔으며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 던져진 가장 큰 숙제다.
지난 8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을 발표했다.

그 안에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181만 건의 다양한 국민 의견을 국정 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난 2개월간 치열하게 노력해서 만들어 낸 결과물이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노인정책은 단순한 공약을 넘어 인간 존중의 철학이 느껴지는 깊이 있는 내용이었다.
12차 국정과제와 13차 중점 전략과제로 구성된 이 청사진은 말 그대로 우리 모두의 목소리를 모은 집단지성의 결과물이다.
정치적 계산이나 선거용 공약이 아닌, 진정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낸 희망의 설계도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노인정책과 관련한 첫 번째 기대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다.
지금까지 많은 어르신들은 몸이 불편해지면 어쩔 수 없이 낯선 병원이나 요양시설을 선택해야 했다. 하지만 생각해 보자, 평생을 일구어온 삶의 터전, 이웃들과 나는 정겨운 추억들이 스며든 그 집을 떠나는 것이 과연 행복일까?
이재명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책은 이런 안타까움에 대한 따뜻한



이 만 호
본보 정치부장

답이라는 생각이다. 어르신들이 익숙한 동네에서, 정든 집에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받으며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 청문을 열면 보이는 그 골목길, 산책하며 만나는 그 이웃들과 함께 인생의 마지막 장까지 써 내려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복자가 어디 있을까?
두 번째 기대는 연금 제도의 개선이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보완하여 세대 간 격차를 줄이고 누구나 든든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하겠다는 약속은 단순히 ‘돈을 더 주겠다’는 차원을 넘어선다. 이는 노후의 불안을 덜어내고 삶에 희망을 심어주는 정책이다.
경제적 걱정 없이 건강을 챙기고 취미 생활을 즐기며, 손자녀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어르신들의 일상이 얼마나 달라질까. 돈의 문제가 아니라 존엄의 문제다. 경제적 안정을 바탕으로 한 품격 있는 노년,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진정한 복지사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세 번째 기대는 노인 일자리 확대다. 많은 사람들이 노인 일자리를 단순한 용돈벌이 정도로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일이란 어르신들에게 사회와의 소중한 연결고리이며, 자신의 존재가치를 확인하는 통로다.
이재명 정부는 단순한 생계형 일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르신들의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살릴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자리를 늘려가겠다고 한다.
평생 쌓아온 전문성을 후배들에게 전수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는 어르신들을 사회적 약자로부터 배려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 존중하겠다는 철학의 표현이다.
마지막 기대는 국민 돌봄 관리의 보장이다.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는 노인을 특별한 대상 집단으로만 보지 않는다. 모든 국민이 존엄하게 살 권리가 있고, 그 대원칙 안에서 노인정책을 구체화한다. 이런 접근 방식이야말로 진정한 국민주권 정부다운 시작이 아닐까.

결국 노인의 삶을 돌보는 일이 곧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임을 깨닫게 된다. 오늘 우리가 어르신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훗날 우리 자신이 어떤 대접을 받게 될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다가올 고령사회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얼마 후면 우리 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노인 문제가 곧 모두의 문제가 되는 시대, 그 시대를 준비하는 정책이 바로 이재명 정부의 노인정책이다.
이는 단순한 복지 공약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다. 우리 사회가 나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를 소외시키거나 무가치하다고 느끼게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기도 하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말로만 끝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약속이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실현되는 것이다.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노인정책이 말의 성전에 그치지 않고, 거리의 어르신들 얼굴에 실제 미소를 가져다줄기를 간절히 바란다.
오늘의 노인은 어제의 청년이었고 내일의 우리는 곧 오늘의 노인이 된다. 이 당연한 진실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라 당사자임을 깨달아야 한다.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노인정책이 우리 모두의 현재와 미래를 밝혀줄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나이 들어도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사회가 현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또 기대한다.

사설

급증하는 1인 가구

30년 후엔 1인 가구 수가 천만 가구까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 때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는 전체 가구 중 절반을 넘을 것으로 예측됐다.
2022년 기준 1인 가구는 738만9천 가구로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1% 수준이다. 하지만 30년 뒤 2052년엔 962만 가구까지 200만 가구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52년 41.3%로 7.2%포인트 늘어나게 된다. 1인 가구 비중이 40%를 돌파하는 시점은 2037년(40.1%)이다.
특히 고령화로 1인 가구 중 65세 이상 비중은 2022년 26.0%에서 2052년 51.6%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전체 1인가구의 절반 이상이 노인 가구인 것이다.
2052년엔 1인 가구 중 8세

이상이 23.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
1~2인가구로 넓히면 그 비중은 2022년 62.7%에서 2052년 76.8%로 증가한다. 2인 가구는 부부 또는 형제끼리 살거나 부모 중 한 사람과 자녀가 사는 경우, 비친족 가구 등이 포함된다.
4인 가구 비중은 2022년 14.1%에서 2052년 6.7% 수준으로 줄어든다. 고령층을 중심으로 부부가구가 늘어난다. 젊은 층의 부부가구는 혼인률이 낮아 줄어드는 반면, 고령층에선 기대수명이 늘어난다.
70대 이상이 된 베이비붐 세대의 남성과 여성의 수명 격차가 줄면서 부부가구가 늘어날 것이다. 가구를 대표하고 생계를 책임지는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도 2038년 1천만 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은 제21·22대 국회에서 제출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다.
쌍용자동차 사태 당시 노동자들에 대한 노란봉투 후원에서 유래했다.
2014년 법원이 쌍용차 사태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액 청구 판결을 내리자 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작은 성금을 전달하기 시작 했다.
이것이 시민들의 ‘노란봉투 캠페인’으로 이어져 15억에 가까운 돈을 모금했다. 과거 월급봉투가 노란색이었다는 점에서 착안했다. 손해가압류로 고통 받는 노동자들이 예전처럼 월급을 받아 다시 평범한 일상을 되찾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었다.
기존 법안은 크게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과,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제한은 폭력, 파괴행위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이 노동쟁의를 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기하는 손해배상 책임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했었다.
두 번째로 사용자 범위 확대의 경우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하거나, 플랫폼 노동자들이 플랫폼과 교섭할 수 있는 여지를 골자로 한다.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은 찬성, 국민의힘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노란봉투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이자 더불어민주당의 대선과 총선 공약이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회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을 논의한 건 딱 한 차례였다.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 들어 모두 11건이 발의됐는데, 문재인 정부 때 발의된 건 민주당 2건과 정의당 1건을 합쳐 단 3건이었다.

사신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대통령 거부권 기각 축하하는 아르헨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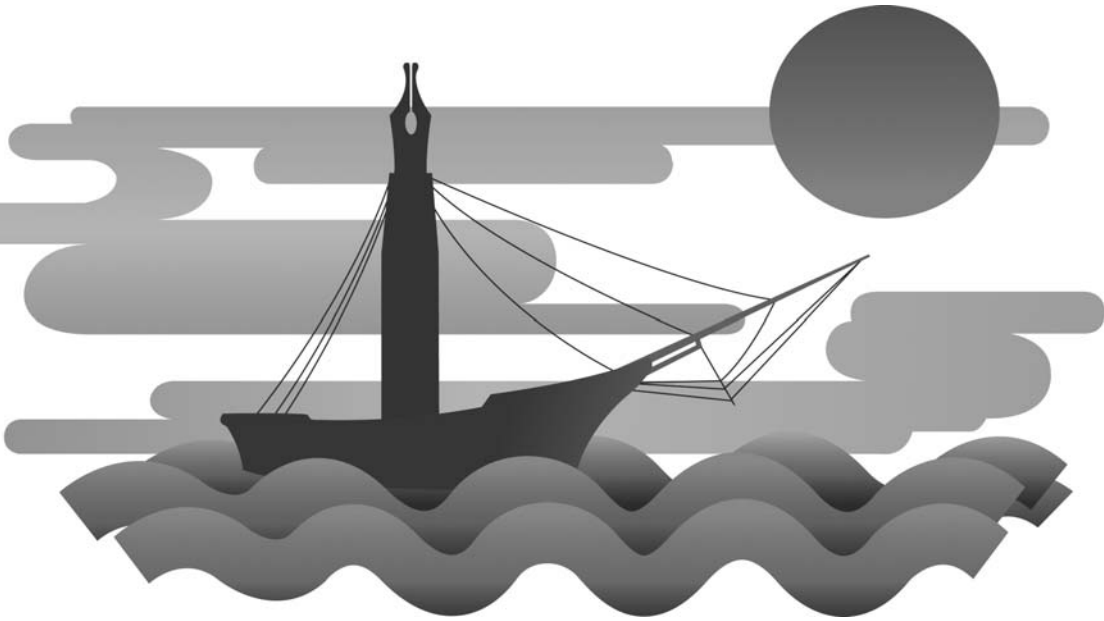


20일(현지 시간) 아르헨티나 하원이 허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의 장애인 보호·복지 법안 거부권을 기각하자 부에노스아이레스 의회 밖에 모여 결과를 기다리던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텍사스 주의회 선거구 조정에 반대하는 시위대



20일(현지 시간) 텍사스 주의회 하원 본회의장 밖에서선거구 조정안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조정안은 공화당 주도로 하원에서 찬성 88표 반대 52표로 통과됐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